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융공공기관으로써 지원을 지속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이유를 밝히고, 앞으로의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영업자와 기업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채 규모가 12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불황으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파산 직전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공적기관인 캠코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캠코의 건전성이 악화된 건 새출발기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총채무가 1억원 이하인 동시에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대출 원금의 90%를 감면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채무의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캠코의 재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3중고'로 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만큼 부실채권 매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서다. 상호금융권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55%로 전년 말(5.26%) 대비 0.29%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도 2년 전(2.97%)보다 1.65%포인트 높아진 4.62%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엔 캠코에 1조6500억원을 출자했지만 올해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도 캠코 재무 구조 개선엔 악재다.

금융당국은 추가 출연을 포함해 캠코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캠코의 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 부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자본금 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정부 채무 조정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국가에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지원이 과도하면 예산이 낭비되고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캠코의 재무 건전성 개선과 효과적인 자영업자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